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2010년), pp. 53~73
연구논문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조동기*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주자들의 시민권이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8년에 수행한 '다인종·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즉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인과 중동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핵심단어: 사회적 거리, 지구적 시민권, 이중국적, 국민정체성, 다문화주의

Ⅰ. 서론

지구화의 직접적 결과이자 동인이기도 한 국제적 이주(migration)의 증가에 따라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구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분명한 경계를 가지면서 한 덩어리로 여겨졌던 국민=국가의 관계가 허물어지거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교수 | infowell@dongguk.edu

나 약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다양한 형태의 이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국적이나 시민권의 문제가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김비환, 2007; 김홍수, 2009; 윤인진, 2008; 최현, 2006).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민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권(citizenship)은 정치 공동체 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의미한다. 국적이 한 국가의 국민이 되는 형식적 자격을 말한다면, 시민권은 특정 국가의 정부에 등록됨으로써 생겨나는 실질적인 법적 지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권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한 국가의 정치 공동체의 성원이 되는 경우에 획득할 수 있다. 시민권은 국민국가(nation state)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민국가와 그 구성원들 간의 일종의 '계약'의 결과이다(Giddens, 1991; Marshall, 1950). 국민국가의 틀에서 보면 시민은 곧 국민이라는 관계가 성립되면서, 시민권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고 국제사회의 구성도 시민=국민이라는 등식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국민국가라는 형식 속에서는 국민인 자와 국민이 아닌 자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그어진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란 그 구성원과 비성원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긋고 구성원에게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이다(Brubaker, 1992: 172).

시민의 권리 실현과 의무의 이행이 대체로 민주적 국민국가의 맥락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시민권의 개념이 이중국적의 개념과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민권은 권리를 보유한 개인과 그것을 보호하는 국가를 연결시키는 기본적 제도이며, 시민 사회는 개인들이 정치와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주된 장이 되는 것이다(Klusmeyer and Aleinikoff, 2001).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시민은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곧 그 국가의 정치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된 시민은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사회적 가치관을 공유하며, 국민으로서의 참정권, 복지권, 시민권을 가지는 동시에 한 국가의 유지를 위한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구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국가의 경계와 시민적 정체성 간의 일치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국가의 주민 중에서, 국민국가와 국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문화적·혈통적 배경이나 역사적·정치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이주자들의 비율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일민족 일국가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도 시민권이 국적과 분리되지 않은 채 인식되어 왔으나, 이주자들의 급격한 유입에 따라 국적과 시민권을 분

리하여 인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주자들의 시민권 문제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영토적 주권을 가지는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적과는 달리 시민권의 일부 요소는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이주자들에게 시민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사회적 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Ⅱ. 지구화와 시민권

1. 시민권의 차원과 모형

시민권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둘러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폐쇄적·특권적 신분이라는 의미에서의 시민권은 로마의 도시(civitas)에서 유래하는데,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도시국가에서 그것은 국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민의 권리를 의미했고 자본주의 성립 후에는 시민 계급의 권리를 의미했다. 반면에 개방적·보편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은 17~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류의 보편적 원리로서 인권사상이 확립된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시민권의 개념은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6; Cohen, 1999; Kymlicka and Norman, 2000; Carens, 2000). 시민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권리로 정의되는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 정치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시민권,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치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이 그것이다.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은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법인이지만, 반드시 법률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시민권과 구별된다. 정치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은 시민의 주관적 소속감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 공동체의 집합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권은 사회통합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시민권의 세 차원 간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시민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자

존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체성의 원천으로서의 시민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awls, 2005: 696). 또한 강한 시민적 정체성은 시민들이 정치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한 정치 공동체에 속한 시민들이라도 모두 동일한 정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도 차별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6). 공화주의 모형은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루소 등과 같은 사상가의 저작에서 발견되며, 고대 아테네의 민주제, 로마의 공화정,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등과 같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공화주의 모형의 핵심적 원칙은 시민적 통치(civic rule)로서, 순환적 공무원제와 같은 고전적 제도와 관행 속에 구체화되어 왔다. 공화주의 모형에서 시민은 일차적으로 공무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공화주의 모형은 시민권의 두 번째 차원인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시민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모형은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로마제국의 팽창 결과 정복된 사람들에게도 시민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시민권 개념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시민권은 법 형성이나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보다는 법에 의해 보호를 의미하였다. 그것은 일상적 사실(facts)이라기보다는 예비적인 법적 지위였기 때문에, 자유주의 모형이 강조하는 시민권의 차원은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이다. 이러한 시민권은 법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을 의미하며, 반드시 영토적 공동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적 공무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모형과 법적 지위에 초점을 두는 자유주의 모형은 현상적으로는 서로 대안적인 시민권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민은 일차적인 정치적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법 제정의 문제는 대표자에게 위임하고 사적 활동에 전념하는 개인이 될 수도 있다.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주의 시민권 모형이 지배적이지만, 사적 시민의 수동성과 무관심에 대한 공화주의 모형의 비판도 여전히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두 모형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는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Walzer, 1989: 217). 개인이 '사적 시민'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들이 '사적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Ackermann, 1988).

시민권에 대한 보편주의 관점은 시민권을 일차적으로 법적 지위의 관점에서 정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정치사회적 권리가 모든 성원들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20세기 사회적 권리의 확장이 근대사회에서의 노동계급의 진보적 통합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Marshall, 1950). 실업과 질병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복지 정책이 정치적, 사회적 통합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후 복지 국가가 성공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은, 평등한 정치사회적 권리의 보장에 초점을 두는 시민권의 개념화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현대 민주사회의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보편주의 관점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특히 과거에는 배제되었던 집단에 대한 시민권의 확장이, 평등과 완전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현실화되면서 보편주의 관점에 대한 회의주의로 이어지게 된다. 보편주의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다원주의 관점은 계급, 성별, 인종, 문화 등에 기초한 차이의 정치적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시민권에 대한 대안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이 관점은 다양한 시각으로 구성되는 민주적 공중의 다원적 속성을 인정함으로써, 어떠한 집단도 선험적으로 더 정당하다는 인식을 거부한다. 이 관점은 또한 전체 사회의 평등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별로 차별적인 대우와 특정 소수 집단의 권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시민권에 대한 다원주의 관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주의 관점과 단절하는 정책도 시민권의 통합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다원화된 소수 집단의 권리에 대한 포용이 시민들의 집합적 소속감의 상실을 의미하게 된다면 서로를 위해 양보하거나 희생하고자 하는 의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지구화와 시민권의 변화

시민권의 문제는 군주제가 지배적이었던 18세기에 '시민'(citizen)과 '신민'(subject)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일반화된 이후에는 시민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부터 시민권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하고 기존의 시민권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자리잡고 있는데, 하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토적 주권 국가에 가해지는 지구화의 압력이다.

서두에서 언급되었듯이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시민권에 대한 개념적 틀은 영토적 주권 국가였다. 시민의 법적 지위는,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는 분명한 영토적 경계를 기준으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법적 지위나 정치적 활동으로서의 시민권은, 영속적이고 집합적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영토적 경계를 가진 정치 공동체를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지구화로 총칭되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시민권과 영토 국가 간의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주 및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수준의 증대와 초국적 경제 거래의 확산, 경쟁과 통신의 폭발적 증가 등에 따라 국가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주권 국가의 개념도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남북 간의 격차가 증대되는 맥락에서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이주가 증가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부 논자들은 주권 국가의 이러한 행위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를 문제시한다. 이들은 적합한 국민을 선별함으로써 그 정치 공동체의 '완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국가의 권리를 문제삼으면서, 시민권의 제도적 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은 민주적 국민국가가 시민권이 성공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맥락이라는 가정에 도전하면서, 국민국가의 상위 및 하위에 위치할 수 있는 다양한 '장'(sites)에서도 시민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국가의 주권은 지구적 차원의 정의 실현에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경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주권 국가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점차 고조되고 왔다. 이에 따라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맥락으로 영토적 주권 국가가 여전히 요구되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자원론자와 회의론자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시민권에 대한 자원론자들(voluntarists)은 국민국가를 벗어나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 정치의 장을 역내적 또는 지구적 수준으로 확장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에 반해 회의론자들(sceptics)은 민주적 시민권은 시민들이 공통된 시민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분명한 영토적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권리가 잠재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무한하기 때문에,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소위 '지구적(global)' 또는 '초국적(transnational)' 시민권이 가능하다(Linklater, 1999). 반면에 정치적 차원의 시민권은 제한된 정치 공동체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Cohen, 1999: 249). 회의론자들은 지구적 차원의 시민권은 정치적 차원의 시민권의 약화를 수반함으로써

시민권의 민주적 속성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반면에 자원론자들은 우리가 과거부터 당연시해 온 눈가리개를 벗어버린다면 지구적 또는 초국적 시민권이 가능하다고 본다. 두 입장 모두 의미있는 시민권은 단순히 법적 지위의 차원만이 아니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민주적 시민권의 정치적 차원에 대한 가정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Ⅲ. 자료와 방법

1.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실시한 "다민족·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의 결과이다. 이 조사의 표본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다단계층화계통표집의 방법으로 추출된 1,101명(유효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 사회의식, 외국출신 이주자에 대한 용인과 배제, 한국민의 변화하는 정체성과 외국출신 이주자와 관련된 시민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다문화의식'의 확산과 정책방향 등이다(오만석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주로 외국 출신 이주자에 대한 용인과 배제, 국민정체성, 이주자와 관련된 시민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과 주요 변수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대한 분석으로, 주요 민족 및 인종 집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리감을 분석한다. 주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보가더스(Emory Bogardus)의 사회적 거리 척도를 변형하여,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로 측정하였다. 민족과 인종을 모두 고려하여 중국인, 일본인, 새터민, 미국인, 동남아인, 중동인과 아울러 미국 흑인, 러시아 백인,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분석한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조선족과 탈북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함께 분석한다.

두 번째는 국민정체성의 기준에 대한 분석으로, 여기서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인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시민적 기반, 문화적 기반, 민족적 기반을 제시하고 각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1]. 여기에 사용된 문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는 것', '역사문제 또는 운동경기 등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것',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등이다.

마지막 부분은 이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분석 모형에 포함된 요인들은 앞의 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세계주의, 보편주의, 단일민족의식, 이중국적에 대한 태도와 아울러 앞에서 분석된 사회적 거리와 국민정체성의 토대와 관련된 변수도 포함된다. 세계주의와 보편주의적 태도가 지구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과 정적으로 연결된다면, 단일민족의식이나 이중국적에 폐쇄주의적인 태도는 그것과 부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가 클수록, 그리고 국민정체성의 기반 중에서 시민적 기반보다 민족적 기반이나 문화적 기반을 중요시할수록 지구적 시민권에 대해 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권에 대한 태도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부모의 인종·민족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진술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세계주의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흔히 측정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지역사회나 국가를 벗어나 세계적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로, 여기서는 '나는 내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보편주의는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나 정치가치조사(Political Values Questionnaire)에서 권력, 성취, 쾌락주의, 자극, 자기지도력, 자비심, 전통, 동조, 안전과 더불어 모든 개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1) 국민정체성의 요소는 시민적 요소와 민족적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Jones and Smith, 2001),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별도로 구분한다.

10가지 가치의 하나이다. 보편주의는 만인과 자연에 대한 이해, 칭찬, 관용, 보호의 측면을 측정하며, 여기서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세계주의나 보편주의와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는 단일민족의식은 우리 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세 문항인 '한민족은 최근까지 단일민족으로 존재해왔다', '현재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비교적 단일한 민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측정하는 이분변수이다.

Ⅳ. 분석과 논의

1.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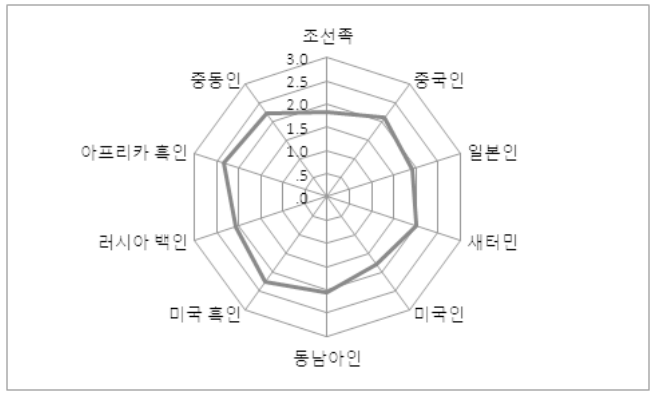
이주자들에게 시민권적 지위를 어느 정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이주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이전에 주요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대한 분석이 먼저 요구된다. 한국의 이주민은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고, 국적, 인종, 민족 정체성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위계적 서열에 따라 각 집단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원숙연, 2008; 황정미 외, 2007). 여기에서는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동남아인, 중동인과 같은 국적 또는 민족 집단과 함께 미국 흑인, 러시아 백인, 아프리카 흑인 등과 같은 인종적 집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회적 거리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국적은 다르지만 동일한 민족인 조선족과 법적으로 국적을 가졌지만 남한사회로 이주해 온 탈북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는 이주자 집단과의 관계를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4,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3,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2,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 그리고 네 가지 관계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5로 하여 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측정하였고, 따라서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거리를 논리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자녀의 배우

자로 받아들인다면 이웃이 되거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이나,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신뢰구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이주자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를 보면 국적이나 민족별로는 중동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가장 크고 미국인에 대해서는 작은 편이다. 인종별로는 역시 백인보다는 흑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크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흑인, 미국 흑인, 중동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큰 반면에 조선족과 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작은 편이다. 중국인, 일본인, 새터민, 동남아인, 러시아 백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그 중간 정도이다.

<그림 1>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



<표 1>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신뢰구간

이주자 집단	평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조선족	1.826	1.769	1.882
중국인	2.103	2.039	2.166
일본인	1.923	1.862	1.984
새터민	2.000	1.935	2.065
미국인	1.791	1.739	1.843
동남아인	2.048	1.990	2.107
중동인	2.218	2.158	2.278
미국 흑인	2.263	2.203	2.324
러시아 백인	2.064	2.005	2.124
아프리카 흑인	2.345	2.284	2.406
중동인	2.218	2.158	2.278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른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은 잘 알려져 있어 흑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크다는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오늘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중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크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남아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보다 유의미하게 크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동남아시아 국적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남아인에 대한 큰 사회적 거리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전개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탈북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큰 편이다. 새터민은 규모 상으로만 보면 아직까지 이주자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터민에 대한 큰 사회적 거리도 향후 다문화 사회의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큰 사회적 거리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는 편견과 차별로 이어진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적 참여와 같은 정치사회적 과정으로부터 이주자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이주자들에게 어떠한 시민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민정체성의 기반과 이중국적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은 종교, 인종, 민족, 사회계층, 성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다양하고도 중첩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정체성은 시민적 정체성이다. 시민적 정체성은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적 원칙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에 토대를 둔 것이다. 이질적인 사회일수록 시민적 정체성이 사회통합과 정치적 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민족과 국민이 일치하는 단일민족 국가라는 믿음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민족'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민족이어야 한다는 사고가 널리 수용되어 왔는데,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중대한 시련이 될 수 있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외국인이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매우 중요하다'~'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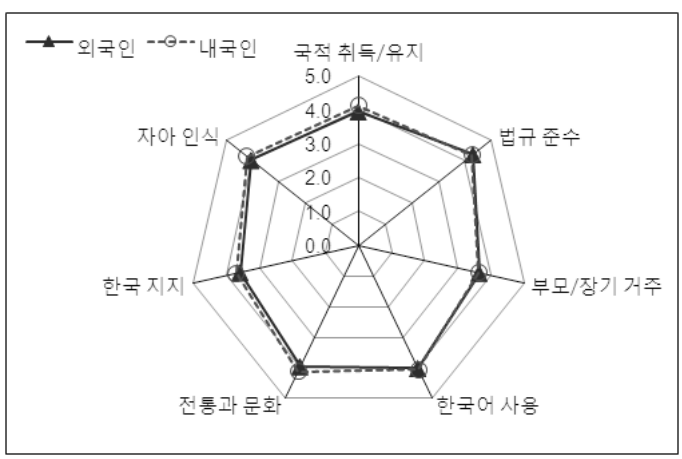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간주되는 조건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는 것',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등이다(〈그림 2〉 참조).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외국인의 경우와 내국인의 경우가 상이한지를 보기 위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외국인에 대한 것과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되 ㉮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 경우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한국인인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조건으로 제시된 항목들 간의 차원 구성을 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요인 1), 나머지 5개 항목이 다른 하나의 요인(요인 2)으로 묶인다. 앞에서 논의된 시민권의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요인 1은 대체로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에 상응하는 것이고, 요인 2는 정체성으로서의 시민권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은 혈연적 요건(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제도적 요건(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주관적 여건(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것)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각각 민족적 기반(ethnic

<그림 2>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의 중요도



<표 2> 한국인이 되기 위한 이주자의 조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 1	요인 2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	0.232	0.809
㉯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	0.160	0.868
㉰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0.739	0.141
㉱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0.715	0.250
㉲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는 것	0.721	0.316
㉳ 역사문제/운동경기 등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것	0.813	0.035
㉴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0.628	0.345

주) 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직교회전(Kaiser 정규화)

basis), 시민적 기반(civic basis), 문화적 기반(cultural basis)으로 볼 경우, 요인분석의 결과는 국민정체성의 기반이 시민적 요소와 민족적-문화적 요소라는 두 영역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이나 문화적 차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조건은 아니다. 요컨대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은 혈통-문화적 조건과 법적 시민적 조건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법적 시민적 조건이 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 국민국가에서 모든 권위의 원천은 국민이다. 국적(nationality)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의미한다. 국적은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로 국가의 인적 관할권이 미치는 기준이 된다.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국가나 정부에 대한 영구적 충성의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이들 국가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 나라의 공민 신분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이전 국적을 말소해야 한다. 국민이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국민국가적 틀 속에서는 이중국적은 근본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이중국적 담론은 폐쇄적 민족주의 유형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서울 올림픽, 구 소련권의 몰락, 지구화 등으로 말미암아 지배적 담론이 개방적 민족주의로 넘어가고 있다(한도현, 2003: 127).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모두 민족주의적이고 국민국가적 태도라는 점에서 지구화라는 사회적 사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민족주의와 이중국적의 불안한 동거'(한도현, 2003)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이중국적을 원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3.7%였고, '어떤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66.3%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중심의 폐쇄적 민족주의든, 한민족 공동체를 포괄하는 개방적 민족주의든, 민족주의의 틀에 갇힌 이중국적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3.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이주자들에게 시민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앞에서 언급한 5개 진술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로 5점 척도를 측정하였다. 이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가장 높고(47.5%),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23.5%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속지주의에 의한 국적의 취득 그리고 인권이나 비차별적 대우와 같은 기본적인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의 부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하지만, 법적 절차에 의한 국적의 취득이나 정치적 행위자 차원의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5개 문항을 합산하여 얻어지는 '시민권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구화된 환경에서 시민권과 관련된 주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검정하였다. 개인이 지역사회나 국가를 벗어나 세계적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세계주의는 '나는 내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진술에 대한 약 43%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인과 자연에 대한 이해, 칭찬, 관용, 보호의 측면을 나타내는 보편주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약 7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계주의나 보편주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

적 태도이다.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로 측정되는 이분변수로, 앞에서 보았듯이 응답자의 66% 정도가 이중국적에 대해 폐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일민족의식은 우리 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세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하였다. '최근까지 단일민족으로 존재해왔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약 64%가 동의를 하였고, '현재 단일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진술과 '앞으로 비교적 단일한 민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41%와 44%로 나타났다.

앞에서 분석된 사회적 거리와 국민의 자격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사회적 거리 변수는 가장 크게 나타났던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로 측정하였다. 국민의 자격은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민족적 기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시민적 기반),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는 것'(문화적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이 밖에 성별(이분변수), 연령, 교육연수,

<표 3>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변수들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시민권에 대한 태도(1)	1.000										
세계주의(2)	0.057 *	1.000									
보편주의(3)	0.148 ***	0.109 ***	1.000								
사회적 거리(4)	-0.207 ***	-0.074 **	-0.082 ***	1.000							
단일민족 의식(5)	-0.150 ***	0.072 **	0.038	0.160 ***	1.000						
이중국적 반대(6)	-0.148 ***	-0.015	0.093 ***	0.113 ***	0.145 ***	1.000					
시민적 기반(7)	0.097 ***	0.191 ***	0.098 ***	-0.041	0.130 ***	-0.095 ***	1.000				
민족적 기반(8)	-0.081 ***	0.099 ***	0.026	0.140 ***	0.236 ***	-0.064 **	0.257 ***	1.000			
문화적 기반(9)	-0.058 *	0.122 ***	0.085 ***	0.096 ***	0.238 ***	-0.111 ***	0.411 ***	0.437 ***	1.000		
주관적 계층 의식(10)	-0.037	0.081 ***	-0.011	-0.060 **	-0.002	0.063 **	0.038	0.017	0.045	1.000	
진보성(11)	0.083 ***	0.018	-0.047	-0.079 ***	-0.126 ***	0.105 ***	0.002	-0.030	-0.031	0.007	1.000

주: * p<0.10, ** P<0.05, *** p<0.01

진보주의(5점 척도), 주관적 계층의식(10점 척도), 외국방문 경험(이분변수) 등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강도는 대체로 약한 편이다. 세계주의, 보편주의, 시민적 기반, 진보성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사회적 거리, 단일민족의식,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적 태도, 민족적 기반, 문화적 기반은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시민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 그리고 민족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 간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하지만 그 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나머지는 대체로 작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는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보편주의, 사회적 거리, 시민적 요소, 단일민족의식,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 등이 이주자들의 시민권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편주의적 태도가 클수록, 그리고 국민정체성의 시민적 기반을 중요시 할수록 이주자들의 시민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표 4>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공선성 통계량	
	회귀계수	표준오차		공차	VIF[1)]
(상수)	15.209	1.130			
보편주의	0.519	0.106	0.143***	0.958	1.044
세계주의	0.098	0.105	0.028	0.933	1.072
사회적 거리	-0.473	0.097	-0.148***	0.899	1.113
시민적 요소	0.618	0.141	0.141***	0.798	1.254
민족적 요소	-0.174	0.115	-0.050	0.762	1.312
문화적 요소	-0.146	0.136	-0.037	0.694	1.440
단일민족의식	-0.158	0.043	-0.113***	0.871	1.148
이중국적 반대	-0.951	0.208	-0.136***	0.931	1.074
성별(남자)	0.053	0.194	0.008	0.957	1.045
연령	0.005	0.008	0.021	0.713	1.402
교육년수	-0.005	0.037	-0.005	0.682	1.466
주관적 계층의식	-0.121	0.068	-0.054	0.913	1.095
진보주의	0.181	0.112	0.048	0.929	1.077
외국방문 여부(유경험)	0.164	0.315	0.015	0.950	1.053
	R^2 = 0.219 F = 10.266***			Dubin-Watson = 1.701	

주: 1) * p<0.10, ** p<0.05, *** p<0.01
2) Variance Inflation Factor

사회적 거리가 클수록, 단일민족의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적 태도가 강할수록 이주자 시민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화의 확산에 따라 인구 이동을 포함한 국민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이 증가되는 맥락에서 출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한국사회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요구된다.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야 한다.

공선성 통계량을 통해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빈-왓슨(Dubin-Watson) 검정통계량을 통해 자기상관의 문제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편이어서,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Ⅴ. 맺는 말

복합적이고 내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정치적 행위로서의 시민권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내적 다양성이 증가될수록 사회통합의 매개로서의 시민적 정체성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시민적 정체성은 민주적 가치와 시민적 원칙에 대한 자발적 헌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다원적 속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공통된 역사나 문화와 같은 전통적 국가의 상징보다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일반적 법적 및 정치적 원칙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통합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 과정의 역할이 강조된다.

민주주의를 시민 자치의 관점(공화주의 관점)에서 보든 아니면 정부에 대한 통제력 행사 능력의 관점(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든, 복합적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의미있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특히 지구적 또는 초국적 시민권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지위로서의 지구적 시민권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시민권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는 쉽지가 않다.

지구화된 환경에서 시민권과 관련된 주요한 변화는 세계주의적 관점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주의적 관점의 확산에 따라 시민권과 국가 정체성 간의 연결이 약화되고 EU의 예가 보여주듯이 비국가적 시민권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됨으로써 국가적 시민권을 대체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인권 체제(human right regime)가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서 환경, 생활양식, 소비 등을 둘러싼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었던 시민권이 점차 차이의 존중에 대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는 과거의 국민국가적 시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어 왔다(Delanty, 2000). 국가로 하여금 차이를 중시하도록 촉진하는 지구적 체제의 영향으로 시민보다 개인이 우선시되고, 시민권 권리는 인권에 의해, 국가는 개인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는 흑인과 중동인에 대해서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큰 사회적 거리는 향후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전개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큰 사회적 거리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는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고, 편견과 차별은 다시 이주자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적 참여 과정으로부터 이주자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볼 때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은 시민적 요소와 민족적-문화적 요소라는 두 영역으로 분리되며,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이나 문화적 차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조건은 아니다. 이중국적에 대한 지배적 담론은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개방적 민족주의로 이행하고 있지만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국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시민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속지주의에 의한 국적의 취득 그리고 인권이나 비차별적 대우와 같은 기본적인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의 부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하지만, 법적 절차에 의한 국적의 취득이나 정치적 행위자

차원의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보편주의적 태도가 클수록, 그리고 국민정체성의 시민적 요소를 중요시할수록 이주자들의 시민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클수록, 단일민족의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적 태도가 강할수록 이주자 시민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지구화의 맥락에서 출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한국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비환 (2007)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법철학연구》10(2): 317-348.

김홍수 (2009) "전지구화 시대의 다문화 한국 사회와 시민권"《동북아문화연구》제18집: 521-538.

오만석·김복수·김경일·은기수·김병조·조동기 (2008)《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한국행정학보》제42집 제3호.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제42집 제2호.

최현 (2006) "한국 시티즌쉽(Citizenship): 1987년 이후 시민권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식"《민주주의와 인권》6(1): 171-205.

한도현 (2003) "민족주의와 이중국적의 불안한 동거"《정신문화연구》26(4): 111-131.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Ackerman, B. (1988) "Neo-federalism?" pp. 153-194 i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Elster, J. and R. Slagstad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Brubaker, R. (1992) "Civic and Ethnic Nations in France and Germany" pp. 168-173 in *Ethnicity* Hutchinson J. and A. Smith (eds.)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arens, J. H. (2000) *Culture, Citizenship, and Community: A Contextual Exploration of Justice as Evenhanded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hen, J. (1999) "Changing Paradigms of Citizenship and the Exclusiveness of the Demos" *International Sociology* 14(3): 245 - E268.

Delanty, G. (2000) *Citizenship in a Global Age: Society, Culture, Politics* Open University Press.

Giddens, A. (1985) *The Nation State and Violence* Vol. 2 of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Cambridge: Polity.

Jones, F. L. and P. Smith (2001)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2): 103-118.

Kymlicka, W. and W. Norman (2000) "Citizenship in Culturally Diverse Societies: Issues, Contexts, Concepts" in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Kymlicka, W. and W. Norman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lusmeyer, D. and A. Aleinikoff (eds.) (2001) *Citizenship Today: Global Perspectives and Practice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Linklater, A. (1999) "Cosmopolitan Citizenship" pp. 35-60 in *Cosmopolitan Citizenship* Hutchings, K. and R. Danreuther (eds.) New York: St-Martin's Press.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wls, J. (1972) *A Theory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6) "Citizenship" http://plato.stanford.edu/entries/citizenship.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2010. 9. 10 접수 | 2010. 11. 8 심사(수정) | 2010. 11. 22 채택]

Social Distance and Attitude toward Migrants' Citizenship in Korea

Dong-Gi 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cial distance and attitude toward migrants's citizenship in Korea, a society with increasing cultural diversity. Using data from the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Survey' conducted by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2008, this study analyzes three main issues: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perception of the bases of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 toward migrants' citizenship and the causal factors of the attitude.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distances between Koreans and African Blacks/Arabs a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between Koreans and other ethnic or racial groups. But the relatively large social distances between Koreans and South-East Asians/North Korean defectors poses a more serious challenge to Korean society, since South-East Asi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have comprised ever bigger part of migrants in Korea. The civil element is found to be more important base of national identity than the cultural or the ethnic bases, and there exists a strong negative attitude toward dual nationality.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at the potential of global citizenship for migrants will be realized by expanding universalism for basic human rights and awareness of the civil base of national identity on the one hand, and by minimizing the strong belief in ethnic homogeneity and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dual nationality on the other hand.

Key Words: Social distance, Global citizenship, Dual nationality, 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ism